민주, '尹정권, 전임정부 지우기' 맹공

이재명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 없어"
윤건영 "윤석열 대통령 정치 보복에 올인"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공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수준의 노동 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 정부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료 남용 등의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도 비난하고 나섰다.

전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에 무조건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고, 이 역시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마저도 '죽도록 일하는' 과거의 노동으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주말도 없는 삶'이 미래의 노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이 사실상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등은 사법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뒤집고 나선 것은 정책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며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느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정은 이어달리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도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예산협상 與 거부시 15일 수정안 제출"

기자간담회서 "尹가이드라인에 與 경직되게 협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께서는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감세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유리 지갑 직장인들, 고금리에 월세 부담으로 신음하는 많은 국민께 더 두터운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예산안 협상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와 10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조속히 타협을 좀 해보라고 독려·촉구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철현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0년 선정에 이어 2번째 선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쟁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하고,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보여준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시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주철현 의원은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민생을 최우선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주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과 수사당국을 동원해 전 정권을 공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농림 분야에서 ▲농산물을 물가 상승 주범으로 호도하는 정부의 그릇된 행태 지적 ▲농협·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유리천장' 혁파 촉구 ▲남해화학의 반복적 노사분규 근본 해결책 마련 요구 ▲마사회·농어촌공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 등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림청 등 정부가 보유한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공급과 정비를 둘러싼 구체적 범죄 의혹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폭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당국의 수사까지 이끌어 낸 것은 올해 국감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수부 서해공무원 월북사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근거 없는 수사 결과 뒤집기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 처리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실정법 위반과 국민혈세를 낭비한 불법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등 현 정권의 전 정권에 대한 정략적·조직적 탄압에 적극 대응했다.

주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 첫 번째 국감에 임하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정운영을 적극 견제하고 정쟁과 무관한 민생 현안은 최선을 다해 챙겨온 노력을 당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

野 일각 '김경수 역할론' 제기

MB 사면 위한 '형평성 맞추기식' 사면 반대 입장 공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또는 사면이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김경수 역할론'이 제기된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가 어의 몸에서 벗어나면 대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야권 지지세를 넓히는 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노무현 정부, 민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김 전 지사 역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가 석방돼도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출마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여타 정치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다른 대권주자가 생기면 당의 외연이 확대된다"며 "(김 전 지사가 석방되면) 당이 든든해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만 김 전 지사의 사면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을 위한 수단처럼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이 MB를 사면하고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 역시 전날 공개된 '가석방 불원서'라는 제목의 자필 문서에서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 측근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역할론'이 나오는데 대해 "그동안 논의되던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전한 것이고, 기 의원 등의 발언은 그분의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민주당 밖에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 김 전 지사 복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으로 크게 한 번 양보하려면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